

남북간 정치·군사적 긴장과 해소 방안

유 호 열 / 고려대학교 교수

한반도 위기 조성

2009년 6월의 남북 관계는 한마디로 경색 국면을 넘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하고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1월 17일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여 남북 관계가 전면 대결 태세에 진입하였다고 선포한 이래 남한에 대한 위협 수위를 지속적으로 고조시켰다. 서해 5도를 비롯한 북방한계선 등 기존의 남북간 군사경계선을 존중하는 기본합의서상의 정치·군사적 합의를 파기하면서 한반도가 전쟁 접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서슴치 않았다. 더구나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이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 반발하여 6자회담의 영구 불참과 핵 개발 재추진 방침을 천명하였다.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국제사회 전제를 상대로 한 군사적 모험주의 노선을 씩없이 강행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막무가내식 도발에 대해 남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발표하자 곧바로 5월 27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한의 결정을 선전 포고로 간주하여 실제 행동으로 보복하겠다고 언급하고 같은 날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성명을 발표하여 정전협정의 무실화와 이로 인해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에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도발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적반

하장식으로 응수하였다. 6월 12일 보름동안의 심사숙고 끝에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결의안 1874호를 채택하였고 남한을 비롯한 전 세계 유엔회원국들은 각기 구체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 되었다.

위기의 요인과 배경

이처럼 일련의 무모하고 강압적인 북한의 협박과 도발은 과거 북한의 전략과 행태로 볼 때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과감하며 모험주의적이다. 남한과 국제사회 전체를 상대로 잔뜩 화가 난 듯한 북한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매우 서두르는 것 같기도 하다. 북한의 반발과 도발의 이유와 배경은 몇 가지 차원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적 지원을 얻어냄으로써 만성적인 경제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대의 현안 과제이다. 부시 행정부와는 불편한 대결 구도를 청산하고 나름대로 대화 국면을 통해 순항할 것 같던 북미 관계는 기대가 컸던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클린턴 국무장관이나 보즈워스 대북 정책 특별대표의 동북아 3국 순방 때에 북한은 오바마 정부의 대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연이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제의도 거절하는 등 상식선에서의 북미 대화에 착수하기를 거부했다. 반면 미사일 발사나 미국 여기자를 억류하는 등 그들만의 강압적인 방식으로 미국을 상대하려다 결국 사태를 건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켰다.

둘째,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도 지난 10년 동안 추진되었던 햇볕 정책이 지속되기를 기대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보수 색채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내심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 선언을 통해 구축된 교류 협력 사업들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하였으나 실상 인수위가 구성되고 남북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의구심과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일단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 10년과는 다른 시각과 방식으로 짜여지고 있다고 판단한 북한은 서둘러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개성공단의

파행과 쌀, 비료 지원 중단, 금강산에서의 남한 관광객 피격 사망,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대북 전단 살포, 남북간 통신 차단과 개성관광 중단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남북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급기야 2009년 전면적 위기 국면을 맞게 되었다.

셋째, 북한 내부 정세가 2008년 하반기부터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68세의 김정일 위원장은 뇌졸중 증세를 보이면서 건강이 심히 악화되었다. 북한과 같은 수령 유일 독재 체제에서 지도자의 위상과 역할은 가히 절대적이라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은 체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비록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의 사망 때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직 후계자를 선정하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서둘러 후계 구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김정일 위원장은 각종 현지도도를 활발히 재개하면서 3남인 김정운을 후계자로 내정하고 본격적인 후계 구도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정운이 후계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26세에 불과한 까닭에 김 위원장 생전에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차기 지도자가 공식화되고 권력을 승계하기까지는 원로 그룹과 중진들의 충성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후견 체제가 마련되어야만 했으며 금년 4월 9일 출범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보장된 국방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한 인물들은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김정운에게 충성할 수 있는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어 한반도 정세 및 남북 관계에서 비타협적 강경 정책을 끊임없이 창출해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조속히 업적을 쌓아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아야 할 김정운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150일 전투를 수행하되 대외적으로 긴장 국면이 최고조에 이를수록 담대한 배짱과 지도력을 검증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듯도 하다.

결국 2009년 체제 위기와 권력 승계 문제에 직면한 북한은 대외, 대남, 대내적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떠안게 되었으며 당분간 남한이나 미국 등 관련 국가들과의 양자간 대화와 협상 또는 6자회담의 복귀 보다는 대결과 강압적 방식의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 대한 반발로서 6자회담 불참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및 지속적인 핵 억지력의 강화를 선포한데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874호가 채택되자 즉각 외무성 발표를 통해 기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와 농축우라늄 개발 계획 착수와 선박 검색 등 봉

쇄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침을 천명하였다. 6.15 공동 선언을 부정하는 남한의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의 운영을 비롯한 모든 혜택을 거둬들이는 동시에 PSI에 전면 참여를 발표한데 대해 군사적 응징과 사실상의 전쟁 상태를 선포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억지력 확장 등 한미동맹을 위한 미래비전에 대해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위험 등을 경고하면서 사실상 군사적 대응 방침을 재강조한 상태이다.

대응책과 해법

이처럼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긴장과 남북 관계의 경색 등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그런 토대 위에서 미국과의 핵군축 담판을 지으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서 인정해서는 안된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1874호의 핵심 사항도 결국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여 핵폐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은 남한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매우 강력히 원하는 까닭에 이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일관되고 강력한 제재안을 가동시킬 경우 북한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 BDA 자금 동결이 북한에 가했던 압박의 효과를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철저한 공조 체제를 통한 금융 및 경제 제재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재를 통한 압박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이 적절한 수준에서 제시될 경우 후계 구도의 조기 정착을 바라는 북한으로서는 심각히 정책 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북한과의 특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가장 많은 지렛대를 갖고 있는 중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동결하면서 새로운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의 압박과 유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모험주의적 강경 노선을 포

기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을 제고하고 북한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북한은 장사정포를 비롯하여 각종 미사일 및 서해 5도 인근에 배치된 해안포 등을 남한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북한이 무모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경우 초반에 철저히 완벽하게 제압하여야 한다.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수세적인 대응보다는 공세적 대응이 현실주의자인 북한의 도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서해 5도 및 북방한계선 주변에서의 도발뿐만 아니라 휴전선 일대와 후방 지역에서도 발생할 국지전적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연합사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에서 제시된 군사·안보적 정책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고조된 정치·군사적 긴장들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색 국면의 일차적 책임은 북한쪽에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세를 오판하거나 왜곡함으로써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점에는 과잉 대응을 자제하고 기다리는 것도 적절한 전략이었으나 전면 대결이나 전쟁 접경에까지 치닫는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 핵과 미사일 등 국제사회 전체의 위협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안이 가동되더라도 남북 관계의 긴장 상태를 풀어가는 방식은 남북이 동의하는 새로운 접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거의 무제한적이고 무한대의 비난과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남북 관계를 경색시켜왔다. 2009년에 들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횟수만도 매일 평균 10회에 이를 정도로 격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남한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이나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하고 있으며 북한이 요구하는 6.15 공동 선언이나 10.4 정상 선언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간 새로운 대화의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양측 지도부의 위임을 받은 고위 인사가 개성이나 금강산 또는 베이징과 같은 제3국에서 의제와 조건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위해 허심탄회 입장을 토로하며 해

결책을 모색할 것을 진정성을 갖고 선 제의할 때가 되었다.

넷째, 남북 문제는 국내 정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간 긴장과 갈등은 곧 바로 남남갈등의 심화로 연결된다. 소모적인 남남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전체가 통합과 소통의 길로 나와야 한다. 현 정부의 거의 모든 대북 정책이나 남북 관계의 현안들이 남남갈등으로 인해 비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햇볕 정책 10년의 공과에 대해서도 균형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퍼주기 논란과 투명성 문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경협과 각종 교류 협력 문제, 인도적 지원과 북한 인권 문제 등 모든 현안과 과제들에 대해 여야, 보수와 진보,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심도있고 진솔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력과 지지도에 관계없이 국가의 정체성과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광범한 합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이 추진될 수 있다. 원칙이 훼손되는 기회주의적 발상이나 편의주의적 접근이 아닌 그야말로 실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내의 광범위한 공감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남남갈등의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

북한은 수령 유일 지배 체제의 독재, 세습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만성적인 경제난과 후진성은 남북간의 격차를 날로 벌어지게 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주변을 위협하고 있으며 재래식 전력 역시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군사 국가이다.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해 세습제를 통한 후계 구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안전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있다. 벼랑 끝 전술로 체제 안보와 적당한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다고 경험적으로 믿고 있다. 현재의 한반도 및 남북 관계의 위기는 상당 부분 이 같은 북한의 잘못된 경험과 관행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질서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현재와 같은 과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 그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체제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케 하는 것이야말로 지난 60여 년 동안 반복되어온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길이다. 統